

사업기간 신축 적용하고 국비 80%까지 차등 지원해야

기난한 지자체 옥죄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스템 개선 시급

지금까지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쇠락한 도시를 되살리는데 추진(예정)하고 있거나 완료된 도시재생사업은 18개 분야 81개 사업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예산은 모두 1조720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8개 사업에 시비, 구비 등 지방비 92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표 참조> 여기에 시와 5개 자치구는 3년간 16곳에 사업을 추가할 예정으로, 들어갈 지방비는 시비 1025억원, 구비 775억원 등 1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재정력이 취약한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등을 신규 추진하고, 사업기간이 남아 있는 중심시가지형 재생사업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도 계속 추진하거나 완료해야 한다.

산업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도시 내외곽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뒷받침했던 구조적인 문제 탓에 다른 대도시에 비해 광주의 쇠락지역은 광범위하지만 예산이 없어 제 때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할 형편이다. 도심 재생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매력 증진이라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행 3년째를 맞아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도시재생뉴딜, 기난한 광주 지자체 "하기 어렵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전국의 낙후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간 모두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 모델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가지로 나뉜다. 문제는 이들 지역에 투입되는 국비와 똑같은 비율의 지방비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형별 국비·지방비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동네살

광주시·5개 자치구

“예산 부족 사업 진행 어려워”

지자체 ‘빈익빈 부익부’ 가속

단계별 평가·인력양성 필요

리기 100억원, 주거정비지원형 200억원 안팎, 일반근린형 200억원, 경제기반형 500억원, 중심시가지형 30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경제기반형은 광주시가 50%, 나머지 사업은 광주시와 자치구가 각각 25%씩 부담해야 한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중 ‘새뜰마을사업’은 국비 비중이 70%,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80% 등이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같이 50%에 불과하다.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도시재생사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쇠퇴지역 매력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장기적인 지원 있어야=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사업 초기에는 높은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모를 실시하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업기간은 3-5년으로 정해져 있어 지자체들이 주민,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스스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까지 더해지고 있다. 국토부의 까다로운 공모 조건, 복잡한 절차, 짧은 준비기간 등으로 인해 용역을 발주하고, 전국에 유사한 계획들이 난무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기존 건축, 토목 등 공간이나 시설 중심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주민 계속 거주 및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도시 매력 증진 등의 취지를 살려내기 힘든 여건에서 사업의 양적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현 정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고안하고 이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그 추진 시스템이 기존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재정 여건에 따라 지자체에 포괄 사업비 형태로 국비를 지원하고 성과를 각 단계별로 측정해나가는 좀 더 세련된 방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재정 여건 맞춤형 국비 지원, 장기사업, 단계별 평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등이 과제=지난 2017년부터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혁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3-5년의 사업기간을 각 구역별 여건을 감안해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민 역량을 높이고,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당 구역의 계획을 수립한 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사업비의 국비 비중을 50%에서 최대 80%까지 차등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재생이 장기전에 걸쳐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전문직과 현장 노하우를 가진 담당공무원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주민, 전문가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을 포옹하며 격려하고 있다. 왼쪽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한대학교는 독립운동가이자 기업인, 교육자로 한평생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한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학교로 현재 고등직업교육 기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대학이다. /연합뉴스

민주·평화·정의당 “5·18왜곡 처벌법 당론 공동 발의”

바른당 “의원들 자발적 참여”

나경원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

정치권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비방 행위 등 처벌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당론으로 5·18 특별법을 개정, 왜곡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기로 했다. 민주당과 평화당은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는 징역 7년 이하에 처하고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에서 이뤄진 왜곡·비방·부인 발언 등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여기에 정의당은 개

정안에 반인권적 행위 등을 포함시켜 법적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평화·정의당은 내부 조율을 통해 조만간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공동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5·18 특별법 개정안 당론 공동발의에 빠졌다. 이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21일 “이미 박주선·김동철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당론은 아니지만 (3당의 특별법 공동 발의에)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내 바른정당 출신들의 부정적 반응이 있어 당론 발의에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3당이 당론 공동발의를 통해 법안을 상

정한다면 기존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과 병합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사위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당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기준이나 잣대도 문제”라며 “해석과 발언을 중범죄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우리 당 일부 의원 발언을 계기로 자기 이념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문 대통령, 역대 두번째

전문대 졸업식 깜짝방문

“기성세대 장벽에 좌절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기도 부천 사립 전문대학 유한대의 졸업식 참석을 택했다. 현직 대통령이 전문대 졸업식을 찾은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충청대 졸업식 참석에 이어 18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

유한학원은 독립운동가이자 유한양행의 창립자로도 유명한 고(故) 유일한 박사가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 사회공익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철학에 따라 1962년 설립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기성세대가 만든 높은 장벽에 좌절해 도전을 포기하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누구나 평등한 기회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노력하는 만큼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보는 ‘기성의 틀에 갇히지 않는 도전정신’이라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청년 세대가 4년제 중심·서울 중심·국공립 중심의 기존 대학 서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회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및 5개 자치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

<단위:억원>

연도	유형	위치	사업명	지방비 부담 규모
2017	우리동네살리기	서구 농성동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 농성골	50
	주거지원형	광산구 도산동	어르신이가꾸는 마을, 꽃보다 도산	79
	일반근린형	남구 양림동	근대역사문화의 보고, 살고 싶은 양림	100
2018	경제기반형	북구 중흥동	광주 역전, 창의산업 스타트업 밸리	250
	중심시가지형	북구 중흥동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150
	주거지원형	동구 동명동	문화가 빛이 되는 동명마을	100
	주거지원형	서구 농성동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	100
	주거지원형	남구 사동	더 천년 사직, 리뉴얼 선비골	100

오늘 전국 550개 단체 참여 ‘5·18 왜곡 처벌법 제정·한국당 규탄 범국민대회’

‘5·18 망언’을 규탄하기 위한 범국민대회가 오는 23일 서울에서 대규모로 열린다. 5·18시국회,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계광장에서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자유한국당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최 측은 이번 범국민대회에 5·18 비상

시국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전국 550개 시민단체 등에서 1만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5월 단체를 포함해 시민사회단체, 정치, 노동, 여성계 등 1500여명이 상경한다. 참석자들은 북한군 투입설 등을 주장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 제명과 사퇴

를 촉구하고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누구나 상경 집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참여자는 22일 낮 12시까지 접수하며 상경 버스는 23일 오전 8시 광주시 서구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출발한다. 차비 2만원 필요. 문의·접수 062-360-0552. /김용희 기자 kimyh@

